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SSUE PAPER
KWDI 이슈페이퍼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 권인숙 발행일 : 2019. 4. 30
April
2019

수행과제명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과제책임자 홍승아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49 / E-mail: hongsa@kwdimail.re.kr)

성평등한 노동권과 돌봄권 보장을 통한 저출산대응전략 모색

초록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만혼과 비혼을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주목하였으나 만혼과 비혼현상의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성평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전통적 가족주의의 약화, 가족의 제도성 약화, 가족구성 다양성에 대한 요구 증가, 젠더역할의 변화와 성평등사회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시민권의 보장을 통하여 삶의 질을 제고하고, 평등한 가족문화의 확산,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선택권 보장, 노동시장내 성격차 해소, 돌봄 연속성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 그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은 만혼과 비혼을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만혼과 비혼현상의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성평등 요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였음.

- 최근의 연구들은 젠더역할과 젠더관계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음. 연구들은 선진국에서의 출산율 반등은 노동시장과 가족내 성평등이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여성들의 가치관과 태도, 행동은 변화되었지만 여타의 사회제도나 가족제도, 가족관계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평형상태가 와해됨. 이들의 확산이론에 따르면 성평등주의가 확산되면 성평등을 수용하는 집단이 늘고, 결과적으로 출산태도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함(McDonald, 2000;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등).

- 한편, 노동시장내 성격차, 성별 임금격차,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이슈는 여성의 노동시장내 지위를 제한하게 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유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여성들은 결혼과 가족을 선택하는 대신 일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출산의 문제로 귀결됨.

-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저출산 대응전략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음.

2. 한국과 일본의 제도특성 및 평가

- 우선 양국은 저출산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을 보육정책에서 시작했으며, 또한 그동안의 정책추진이 보육정책 혹은 자녀양육지원정책에 집중되어 추진되어 왔다는 공통점이 있음. 한국은 보육비지원제도를 확대해 왔고, 일본은 대기아동 해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가족변화와 관련하여 양국에서 수용하는 변화의 범주와 내용은 크게 다름. 한국의 경우 선언적 차원에서나마 3차 기본계획에서 다양한 가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미혼모, 동거, 비혼출산의 문제까지 처음으로 정책범주로 끌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음.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정상가족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변화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의 취업에 대한 태도에서 양국은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크게 부족하였음. 한국의 경우 1~3차 기본계획에서 여성인력을 '잠재인력 활용' 차원에서 접근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나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추진이 미흡하였고, 적극적인 여성경제활동 지원보다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일본의 경우에도 아베노믹스 기조 하에 여성의 고용률이 증가하였으나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여성들이 많아서 여성고용의 질 개선을 충분히 이루지 못하였고 일본의 성장전략에 동원된 여성 경제활동으로 평가됨(오사와 마리, 2014:52~53; Shin, 2017). 특히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나 세제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기반하고 있어서 '보조소득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여건이 되고 있음.

- 고용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수년간 주요 정책이슈로 부각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와 캠페인을 확대하였으며 특히 후생노동성의 "이쿠멘 프로젝트"를 통하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사업장 현장에서의 변화속도는 빠르지 않음.

- 돌봄과 관련된 젠더역할 분담은 양국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음. 한국과 일본의 남성 돌봄참여 시간은 여성의 각각 1/5과 1/6정도에 불과함.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가족내 젠더관계의 변화를 기획하기보다는 최근 '3세대 동거' 지원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돌봄의 가족주의 방식으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함.

3. 한국과 일본 2040세대의 가족, 일, 삶 가치관 조사: 설문조사와 FGI 분석결과

서울과 도쿄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25세~44세, N=2,000)와 FGI(30대, N=28)를 실시하였으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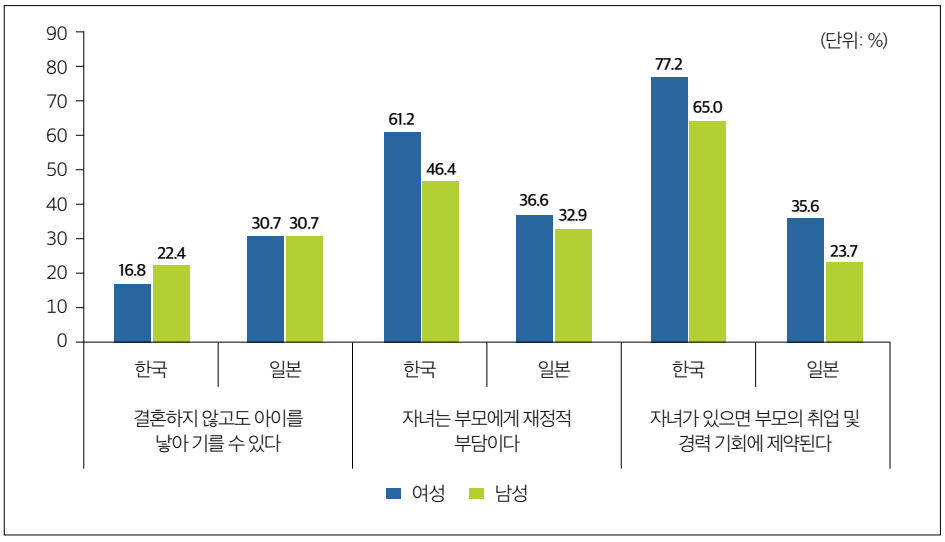
1) 가족구성과 가족 내 젠더관계

- 가족구성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는 규범화된 결혼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음. 구체적으로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한국 여성 61.4%, 한국 남성 43.8%, 일본 여성 62.4%, 일본 남성 48.7%)고 응답하고 있음.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한국 여성 48.8%, 한국 남성 33.4%, 일본 여성 53.0%, 일본 남성 38.0%)로 응답함. '결혼은 부담이다' (한국 여성 64.0%, 한국 남성 55.2%, 일본 여성 32.3% , 일본 남성 39.9%), '결혼보다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 (한국 여성 44.4%, 한국 남성 33.0%, 일본 여성 28.2% , 일본 남성 27.2%), '결혼하면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한국 18.8%, 일본 27.4%) 등의 결과를 보면 결혼과 자녀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특히 한국여성이 결혼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며,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대한 거부가 더 강하고, 자기 자신의 성취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동시에 한국과 일본 모두 비취업, 임시/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나 자영업/무급종사자에 비해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노동시장내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계층에서는 더욱 가족을 구성할 의향이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가족 내 젠더관계와 관련하여,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족돌봄자 모델'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동의도가 매우 낮은 가운데, 일본여성은 한국여성보다 동의도가 높음(한국 여성 7.4%, 한국 남성 11.4%, 일본 여성 19.2% , 일본 남성 17.2%). 남성의 육아참여에 대한 동의도도 한국 응답자가 일본 응답자에 비해 남성 육아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양국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음(한국 여성 96.0%, 한국 남성 87.6%, 일본 여성 86.3% , 일본 남성 76.7%).
- 규범화된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의 필요성, 가족내 젠더관계 등에서 한국 여성의 태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음. 즉 한국 여성이 가족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동시에 강력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한 것임.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면서 전통적인 가족관, 가족내 젠더관계에 대한 변화요구 역시 매우 강하게 표출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음. 반면 일본에서는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개인수준에서는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사회적인 수준으로까지 공론화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개인차원에서의 수용성이 비교적 강하게 남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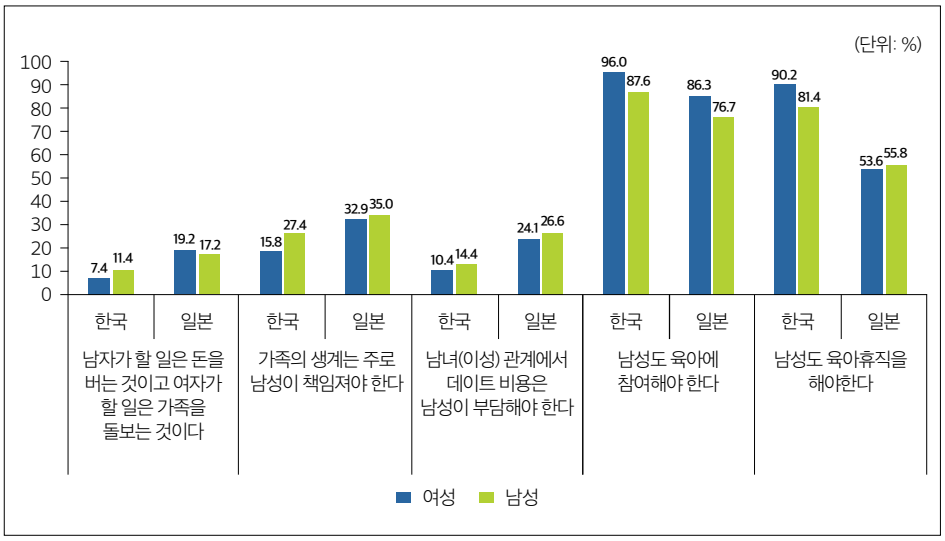
▶ 그렇지만 여성들의 강력한 변화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성별분업은 온존하고 있음. FGI에서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독박육아', 과도한 교육열, 사교육비,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사회현실 등 다양한 문제가 나왔음. 결과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부모 양쪽 혹은 어느 한쪽의 취업 및 경력기회에 제약이 된다'(한국 여성 77.2%, 한국 남성 65.0%, 일본 여성 35.6% , 일본 남성 23.7%)의 결과를 통하여 여전히 여성의 취업에 자녀양육은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한국 여성의 동의도가 일본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요약하면, 한국과 일본 모두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동의도는 매우 낮지만(의식수준),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녀양육은 취업에 부담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가족내 성평등한 육아분담이 작동되지 않고 있음. 특히 이러한 현실에 대해 한국 여성이 가장 저항수준이 높고, 일본 여성은 자녀양육 부담을 한국 여성보다는 덜 제약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일본사회내 여성 경제활동을 2차소득자, 피부양자의 범주로 규정하여 양육자로서의 여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에 크게 기인하고 있음.

[그림 1]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견해: 국가, 성별 비교(매우+대체로 그렇다 응답값)



[그림 2] 성역할에 대한 인식: 국가, 성별 비교 (매우+대체로 그렇다 응답값)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력단절

- 본 조사결과 남성응답자들은 현재의 배우자/파트너 혹은 미래의 배우자/파트너가 '결혼해서도 계속 일을 하는 형태'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한국: 42.0%, 일본: 39.9%). 이는 안정된 고용과 표준화된 생애전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성들 역시 전통적 방식의 가족 만들기를 주저하고 있는 한 형태로(김경희·홍지수, 2013: 207) 이해할 수 있음.
- 노동시장내 종사상지위는 양국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주평균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은 한국 45.8%, 일본 31.8%로 나타났음.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좋은 일자리 찾기', '생계꾸리기의 어려움'. '승진, 업무배치에서의 직장 내 성차별' 등 모든 영역에서 남성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들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과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측정한 결과, 육아와 관계없이 계속 취업을 원하는 희망에 비해 실제로는 출산육아기의 경력단절을 수용하거나 혹은 비혼으로 계속 일하는 방식, 두가지의 선택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남성과 달리 여성은 결혼, 출산, 양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력단절을 경험할 위험이 높음.

3) 장시간근로와 일생활균형

- 기혼 응답자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한국, 일본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7.2%가, 일본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20.4%가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음. 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양국 모두 소득이 적어서(한국: 22.1%, 일본: 39.8%)가 공통적인 이유였고, 한국의 경우 '노동시간이 길어서'(24.7%),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18.2%)라는 응답이 많았음.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과로사를 초래하는 장시간근로문화에 대한 문제제기되고 있는 측면과 연결됨. 일본에서는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에 입사한 뒤 월 105시간 초과근무를 한 끝에 자살한 다카하시 마쓰리의 사례가 초과근무,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1] 한국 역시 한 방송사에서 청년 PD를 혹사하여 약 3달간의 평균 수면시간이 1일 4~5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과로를 강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음[2] 양국 모두 장시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있었고 획기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1) 연합통신(2016). "월 105시간 초과근무... 일본 광고회사 덴쓰 신입사원 자살 파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5/0200000000AKR20161015025900073.HTML (2018.8.20.접속)

2) 경향신문(2017). "청년 착취해 만든 즐거움을 끝내야...TVn 혼술남녀 신입 PD 사망사건에 각계 성명 잇따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11908001&code=940100 (2018.8.20.접속)

- FGI에서도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적절한 노동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발견되었음. 이들은 승진을 위해 회사에서 야근에 혹사당하며 회사인간으로 살기보다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자는 삶의 자세를 보이고 있음[3] 어차피 본인이 만족할만한 충분한 소득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회사에서 적은 소득을 받으며 일하고, 일과 후에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거나 자기시간을 가지면서 사는 삶의 방식을 원하고 있음.
- 한편, 남성 역시 상당수준의 일·가족양립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줌. '가사, 자녀양육, 가족원 돌봄 때문에 직장에서 불성실하다는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한국 남성(11.2%, 한국 여성 6.1%)는 경험과 '직장에서 업무처리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한국 남성 10.7%, 한국 여성 8.9%)은 여성에 비해 남성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가족 내 성평등한 역할분담과 함께 일·생활균형정책 확산을 통해 가족생활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임.
- 한편, 기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을 측정한 결과, 한국의 경우 응답자의 21.7%가 '안 되고 있다'(매우 안 되고 있음+잘 안 되고 있음)고 응답한 반면, 일본의 경우 10.2%로 나타났음. 이와 함께 한국과 일본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일·생활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양국 모두 가족 내 성평등한 역할분담, 일 중심적인 사회문화 개선, 일하는 방식의 개혁 등으로 조사되었음.

3) 프레시안(2018) "소확행, 촛불 이후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프레시안, 2018.3.30. 접속

4) 변화의 열망과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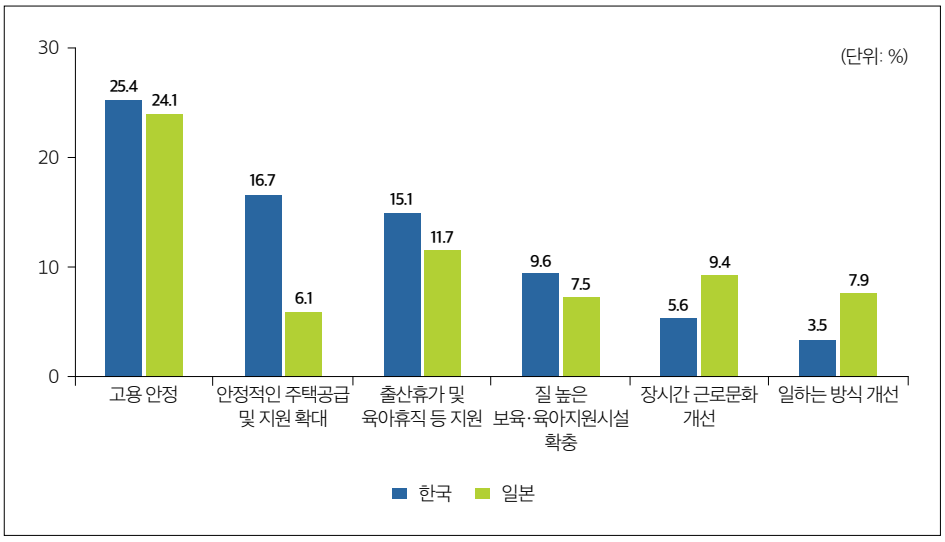
-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서 살펴본 주요 결과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전통적인 가족모델의 해체, 가족내 성평등한 젠더관계에 대한 요구,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한 노동시간, 적정수준의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소득 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났음.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요구들에 비해서 현재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남성 생계부양자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내 소득구조, 자녀양육 주책임자로서의 여성, 일중심적인 기업문화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와 '현실적인 삶'의 형태 간에는 괴리가 큼.
- 계층사다리 기능 약화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이 있음. 젊은 세대들이 신계급사회를 수저계급론으로 비유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력을 통한 계층상승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다음 세대의 계층상승에 대해서도 비관론이 증대하고 있음(이병훈, 2017). 특히 30대가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나[4], 사회이동성이 어려워지면서 출산의향과 기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와 관련된 불안감(예: 노후준비 부족, 노후 돌봄의 공백,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 등)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FGI에서도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현실에 대한 토로가 많았는데,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이나 출산, 자녀양육을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선택의 폭은 넓지 않음. 이들은 현재의 불안정한 일자리, 충분하지 않은 소득 등으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의 궁핍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소비생활이 되지 못하는 현재 생활에 대한 불만족 등이 컸음. 이러한 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나타났음. 더욱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조건이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가나 제3자가 이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기는 어려움.
- 이상의 결과는 현재 한국의 2040세대는 가족구성과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가족돌봄, 노후생활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문화로 인하여 결혼 이후 부당하게 많은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임.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의 생계부양 책임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남성과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가진 여성들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예측한 신경아(2014: 182)의 분석처럼 본 조사에서도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변화, 젠더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성평등한 일·생활균형 정책과 성평등 문화의 확산,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미래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전 제시 없이는 저출산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저출산정책은 성평등정책,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과 연동하여 추진해야 할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줌.

4)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 (2018.10.22. 접속)

5) 저출산 인식과 태도

- 국가수준의 저출산 문제는 개개인에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일단 한국과 일본의 응답자 대부분은 저출산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한국 84.8%, 일본 78.7%). 반면 저출산 현상이 응답자 자신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관련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한국: 62.2%, 일본: 62.4%) 국가수준의 위기의식보다는 낮게 나타났음.
- 한편, 저출산 현상의 원인(1순위)은 양국 모두 '고용, 경제 불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한국: 24.3%, 일본: 28.0%). 한국에서는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17.7%), '미혼, 비혼의 증가'(12.6%), '일·생활균형 어려움'(9.1%)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일본에서는 '미혼, 비혼의 증가'(22.7%), '일·생활균형 어려움'(11.6%)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유사하게, 저출산 현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회여건(1순위) 역시 양국 모두 '고용안정'(한국: 25.4%, 일본: 24.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지원 확대'(16.7%),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지원'(15.1%)이라는 응답이, 일본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지원'(11.7%),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9.4%)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한 관점에서 고용안정과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함.

[그림 3] 저출산 해결 위한 사회여건(1순위, 상위 6개 응답)



4. 한일 기혼여성 행복 결정요인 분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les)와 일본 게이오대학의 일본가계패널조사(KHPS/JHPS)를 이용하여 유배우 여성의 행복 결정 요인 분석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연령, 학력 변수는 한국에만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고용형태도 한국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정규직, 비임금 취업여성의 행복 수준이 비정규직 취업여성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행복 수준은 낮아지는 음(-)의 영향을 미쳤음. 한국과 일본 모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횟수는 유배우 취업여성의 행복 수준에 양(+)의 영향을 미쳤음.

5. 정책 제언

- **사회적 시민권 보장**
  - ▶ 사회적 시민으로서의 삶의 질 제고
  - ▶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 보장

- **새로운 가족문화 확산**
  - ▶ 가족내 성평등한 역할분담
  - ▶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 가족평등지수 개발
  - ▶ 출생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

- **노동시장 내 성격차 해소**
  - ▶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 ▶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가족시간 확보

- **돌봄 연속성 강화**
  - ▶ 가족내 평등한 돌봄분담
  - ▶ 정부-지역사회-학교-가족의 연계체계 구축

참고 자료

김경희·홍지수(2013). “한국과 일본의 가족의식에 관한 비교 연구”. 「가족과 문화」 25(3) : 186-213.
신경아(2014).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 여성없는 여성정책”.「페미니즘연구」10(1) : 89-122
오사와 마리(2014). “일본의 사회적 취약성의 극복과 생활보장체계”. 「젠더법학」 5(1/2) : 43-69.
이병훈(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4(2) : 157-179.
Arpino, B. G. Esping-Andersen, and L Pessin(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370-382
Esping-Andersen, G. & Billari, C., F.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i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Shin, K.Y.(2017). “‘All Women Shining Society Policy’ Under the Abe Government: A Japanese Version of Gender Mainstreaming Policy”. presented at the Berlin Symposium 2017.12.1

주관부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